

# 원내 제1·2당, 상대 지도부 윤리위에 제소...사상 초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에 지난 12일 나경원 원내대표의 본회의 발언과 관련해 국회 의안과에 나경원 원내대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정국 냉각의 도화선이 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수석대변인 발언이 여야 지도부의 상호 윤리위 제소로 비화되면서 강 대 강 대치국면이 극단으로 치달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나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한국당은 이날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같이 결정하고 급명간 윤리위에 징계안을 제

### 한국당 “야당 원내대표 연설 조직적 방해...이해찬·홍영표 책임” 민주당 “나경원, 색깔론 동원해 모독...태극기부대에 바치는 망언”

출하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어제 민주당은 조직적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방해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의 여러가지 언사 또는 행동이 명백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따라서 먼저 조직적 방해를 지휘한 이해찬 당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의총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다른 의원들에 대한 방해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추가로 윤리위 제소를 결정하겠다”며 “민주당이 의회주의를 이제 중단하지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에서 황교안 대표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문제 삼는 정외대·여당을 겨냥해 “폭력적 독

재”, “공포정치”, “정권 폭정” 등의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황 대표는 “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는데 단상에 뛰어갔다. 발언을 방해하고 구호를 외치고 의장석으로 올라가고, 마치 국회가 과거 독재 시절로 회귀한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사법부, 언론을 전부 장악한 이 정권이 이제 의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거 아닌가, 폭력적 독재로 짓누르겠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공포정치이고 죄과 독재 아니냐. 대통령을 비판했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입을 틀어막는 것. 정말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극복하려고 했던 공포정치와 무엇이 다른가”라며 “좌파 독재 정권의 의회 장악 폭거를 도저히 묵

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여당이 국민의 말에, 야당의 말에 귀를 닫는 이 모습을 보면 한마디로 마이동풍 정권”이라며 “오늘은 저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참 말도 안되는 걸 갖다붙여서 하는 짓을 보면 견강부회 정권”이라고 분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표발의한 징계안에는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수행

함에 있어 국회법 제25조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밀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모독을 했다”고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발언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스럽게 하는 망언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한 동시에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색깔론을 동원해 모독한 것이고 나아가 대한민국과 국민을 모독한 것”이라며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태극기부대에 바치는 극우적 망언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미세먼지는 사회재난’...대책법안 8건 국회 통과

미세먼지 사태가 사회재난으로 인정돼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된다. 수도권 등에 한정된 대기 관리 권역도 전국으로 확대되고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여야는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합의한 대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개를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우선 여야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자연재난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미세먼지 저감계획과 재해영향평가를 정부가 마련해, 추후 국회와 협의,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LPG차량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근거가 담겼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찬성 224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역사와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등 대중이용시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 도입을 의무화하고 설치비용도 지원,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확대·적용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35명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10분의 1 규모를 차지하는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계획 등이 담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이외에 초등학교 1, 2학년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재석 238명 중 찬성 236명, 기권 2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꿨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 LPG차 일반인 확대·교육 및 대중시설에 정화설비 설치 대기관리 권역 전국 확대·친환경차 확산 등 관련법 처리

일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LPG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개다. 해당 법안들은 각 소관 상임위원

## 황교안 “5·18망언 당내 징계 논의, 절차 밟고 있다”



5·18역사특별법개정추진위원회, 5·18민주공제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현승(왼쪽 네번째) 당대표 비서실장에게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제명 및 의원직 박탈, 5.18에 대한 왜곡 및 모독을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 포기를 담은 요구서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5·18 관련 망언을 한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당내 징계에 대해 “절차를 밟고 있고 조만간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모두 2.27한국당 전당대회에 후보로 참가해 당내 징계결정이 유보된 바 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좀 더 준비하는 게 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 본인이 ‘4·3 보훈선거 이후 징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는 것에 대해 “전혀 그런 말 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장병완 “5·18특별법 포함 안되면 패스트트랙 안해”

장병완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공조와 관련해 “5·18 특별법이 안 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처리를 안 할 것”이라고 목소리

를 높였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동의) 했는데 바른미래당이 입장 정리가 안 됐다. 바른미

래당은 ‘선(先) 선거제도 확정 후(後) 법안 논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공수처법, 검정수사관 조정 관련법으로 압축하겠다. 국가정보원은 포기하겠다고 했다”며 “우리는 5·18특별법을 처리 안하면 패스트트랙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

**광산구**